

“5월 국회 열자” vs “野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민주-한국당 원내대표 상견례

더민주 이인영

“선거 전 국회 심각한 상황 만들어
野입장 경청... 국회정상화 총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직전 우리가 국회에서 너무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지혜와 마음이 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여러 번 반문했다”며 “경청의 협치를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국을 풀어내겠다”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조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면서도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심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당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어려워진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현안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최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몰두 ▲경청의 협치 정신 ▲멋진 정치 경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며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것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국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 심사 등 과제가 산적했다.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 3000여건에 이른다. 특히 패스트 트랙 지정안의 처리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이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가 얽힌 정국을 어떻게 풀지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 관계뿐 아니라 야권마다 난립한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당선 소감을 전하며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조금 야속하다. 너무나 강력한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될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만난 후 이어 바른미래당·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찾기도 했다.

내년 4월 있을 21대 총선에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이해찬 대표와 원내·외를 각각 부담하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재집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여론 일부는 이 원내대표가 당내 비주류로 분류돼 당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친문계’가 대거 당으로 복귀하면서 비주류 현역 의원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원내대표가 주류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결선에서 27표 차이로 누른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홍남기, 추경통과 호소에도 여전히 ‘난망’

(경제부총리)

여야 갈등, 심사 과정도 난항 예상
“추경 집행으로 경기불황 대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돼 추경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며 추경안 통과를 간곡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 대응에 실기할 경우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5월 중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 추경으로 이어지고, 사업이 신속히 집행돼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 7000억원 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 추경예산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통과가 난망한 실정에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민생투쟁 대장정’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내용 극화로 오는 15일 원내대표를 교체하기까지 이르는 등 정국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나경원

등 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가졌고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트였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가동하면 추경안은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 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을 구성했다. 한국당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등 범진보권까지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것을 고려하면 추경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개에 가린 실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는 13일 선출할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와는 추후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김학의 前 차관 검찰 출석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제조업에 활력”

산업부 장관, 시화 국가산단 방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R&D 로

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사업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증가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외 리콜제품 국내유입 차단 강화

당정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 원회관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입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5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개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 제재에도 리콜 대상 제품은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 조치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을 감시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당정, 직구 불량제품 논의 간담회 리콜대상 5개 제품 여전히 판매

나타났다. 야구화와 영양제, 완구, 화장품 2종 등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환급 등을 권고하는 게 전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제품 46건을 선정해 직접 구매하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석대성 기자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방 차단 총력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관리 대책 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금까지 15건이나 검출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